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리스크와 위협의 위기

하고 야당 공천 탈락자를 스카우트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에서는 계파갈등으로 탈락자들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나 상대편 당 공천을 저울질하는 형세이다. 제3지대는 양당의 구태정치를 타파하고자 중도층을 겨냥하여 무작정 통합했다가 11일 만에 결별하고 공천 탈락자 이삭줍기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한다.

이런 정국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미·중 경제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예상외의 심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미흡하거나 갈팡질팡 정책으로 야당과 타협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대다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삶은 무너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총선과 맞물려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힘없는 환자의 삶이 들릴 뿐이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이 정부와 야당인지, 야당인지, 지난 정권인지 서로를 탓만 할 뿐이지 서민의 고통과 아픔은 그저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의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 금융, 주택과 복지, 교육,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 및 남북 대결과 관련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위태로운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위험은 글로벌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닥터 돔(Dr. Doom)'으로 잘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초거대위협(MEGATHREATS)'의 10가지 위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노면 시장이 불러들인 부채위기, 민간 및 공공부문 정책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을 통해서 부채와 고령화, 그리고 정책의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금리의 함정 그리고 호황과 불황의 위기, 거대 스테그플레이션의 도래, 통화 붕괴와 금융 불안, 세계화의 종말, AI와 사라진 일자리, 지정학적 갈등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거주 불가능한 지구"로 금융 불안과 세계화, 일자리, 신냉전, 환경의 위기를 주목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의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에도 벌써 남녘에는 흥매화와 동백이 피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정치는 정치적 의도로, 경제는 시장의 힘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선거철만 되면 구태의 모습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정치는 정치적 테러가 자행되면서 이미 상대편을 중요하는 범죄의 수준에 다다르고 국가적 보수주의와 역사수정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소위 운동권 청산과 정치검찰 청산의 프레임 대결로 유권자를 편 가르고 있다. 운동권이란 전체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시대상황에서 표출된 저항의 세력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정신으로 계승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검찰은 법과 제도에서 정치 중립의 정부조직으로 지속적이지만 조직 내에서 권력을 탐하는 집단으로 변하는 정치적 성향의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프레임은 정치적 선전과 선동(propaganda)으로 프레임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청산의 대상은 일제 잔재이고 역사수정주의이다.

역사적으로 위험과 위협의 위기는 반복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 성장의 기적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학자 루비니가 제안한 것처럼 "초거대위협"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벗어나 성장과 기술혁신이 뒷받침하는 "딜" 암울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언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여야 양당은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를 소망하듯이 옮기면서 지역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서로를 정치쇼라고 비방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기득권의 철세 정치인들과 가족 비리 의혹의 정치인을 공천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으로, 야당은 재정지출을 고집하는 동안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0%를 기록하여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래로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여파로, 1998년 IMF 사태로, 2020년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1.9%로 25년 만에 추월

너무 모르는 일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는 나름대로 환자생명을 돌본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응급 진료에 임하는데 정부에서 갑갑적으로 몰아가기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병원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OECD 평균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인구 1천 명당 그리스(3.6),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순인데 우리나라는 2.6이지만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하며 30년 동안의 대정원을 동결했지만 인구감소로 수치가 20에서 2.6으로 상승했다.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6년 교육 후 5년 수련하면 10년 후가 되는데 출산율이 0.65로 떨어져 인구감소가 심각해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OECD국가 중 최상위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점에서 논의하여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OECD 보건통계 202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배로 역시나 가장 많은 급성기 병원 병상 수를 가지고 있고 2016년에 비해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2022년 말 기준 3만 6천67개로 수련전에 비해 그 수와 비중이 급증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 비용은 무려 16조9천568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1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대형종합병원의 분원 설립을 통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도 인해 향후 6년 이내 11개의 대형병원 분원(급성기 병원)이 수도권에 새로 생기며, 2029년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원 병상수는 7천900개가 더 증가되는 바(김주경 국회의원조사처 입법조사관 자료),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족 현상, 그리고 블랙홀처럼 의료진들이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지방 의료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제언

노령화를 이유로 병상 수, 하물며 급성기 병원 병상 수를 늘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급성기 병원을 늘리면서 여기에 갈 의사수를 늘려 의료경제를 팽창시키는 건 사실 미래 경제를 위협하고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담 부담을 늘림으로 인해 더욱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부터 다시 의료계와 논의해 의사들을 환자 곁으로 돌려보내 주길 바란다.

기고



조 생 구 대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총선을 앞두고 28차례나 복지부와 의사협회 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정협의회를 했지만 한 번도 의대정원을 거론도 않다가 갑자기 2천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정원을 논의하기 전에 첫째,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복원(1차 의원에서 진료 후 2차병원으로, 2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병원으로 가는 시스템) 하자.

서울의 빅5 병원이 32개 대학병원의 60% 환자를 담당하며 지역환자가 서울로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지역병원의 약화를 초래했다. 둘째, 너무 낮은 진찰료와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GNP인데도 병원에 갈 때 초진료가 100불인데 우리나라는 6세 이상은 16,900원으로 1/8수준으로 너무 낮다. 현재 총수입(병장수술)수술비 32만원, 복막염 수술비 58만원, 분만비 50만원으로 일반 의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가와 의료분쟁이 문제가 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면 갈 곳 없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몰라도

독자투고

겨울철은 난방·전열기구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와 함께 크고 작은 축사화재도 전국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하며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축사화재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전기시설의 점검 및 축사 내 난방·전열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축사화재, 관심과 예방으로 대비하자

축사 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를 사용할 땐 먼지(분진)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전환돼야 한다. 통계를 따르면 축사시설 화재의 32%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노후전선은 교체하고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 습관처럼 자리잡아 사전점검이 일상화된다면 축사화재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재·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5·18 진상규명 미처 완성짓지 못한 조사위 보고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이 역사적 사실로 정립됐다. 하지만 발표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쟁점은 미완으로 남았다. 공식 민간인 사망자는 168명으로 집계됐고 총상이 135명으로 80% 이상이다. 무자비한 만행에 대한 지휘계통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우려스럽다.

조사위는 발표책임의 경우 '불능'으로 결론냈다. 조사관들은 불가피한 자위권 발동이란 항변을 반박하며 집단발포 등에 대해 전두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원위는 대부분 주장에 불과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행방불명자와 연결되는 암매장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받은 2곳에서 9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행방불명과 일치한 이들은 없었으며,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내 202구 또한 5·18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다수의 시체가 암매장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추가 소재지 발굴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조사위는 특별

법에 따라 2019년 12월 정부 기구로 출범해 4년간의 활동을 벌였으며, 6월 종합보고서를 완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의회, 교육청, 시민사회 등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보고서 초안 역시 그동안 확인된 내용에 더해 별반 진전이 없어 보인다.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를 결국 적시하지 못했다. 이대로면 부실한 조사로 마무리될 게 뻔하다.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등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보듯 권력의 정점을 지목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광주 시민사회 및 오월 기관·단체는 대정부 권고에 대한 의견을 심층 종합하고 있다. 미흡한 내용의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강력하게 추가 및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는 불능 과제로 넘겨둬선 안 된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실패한 반란'이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책임 규명과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5·18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최대치 인상 시·도의원 의정비 주민 눈높이에 맞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크게 올랐다. 광주·시·전남도 심의위원회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을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의정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으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지방의원은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는다. 광주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8천630원, 2023년 345만6천350원, 2024년 351만5천100원이다. 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294만9천340원, 341만400원, 346만8천400원에 이른다.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반영해은 결과다. 이로써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5천100원, 전남도의회원은 546만8천400원을 받는다. 도의회는 회기 중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챙긴다.

심의위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재정 자립도 등의 요소를 종합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색 맞추기식 절차

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가 하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합당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정 사정이 각기 다름에도 비슷한 수준대로 동일화하는 것도 문제삼는다. 잦은 일탈과 자질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은 의원들이 얼마나 성심껏 일했는가를 보다는 다른 곳과 형평성을 구실로 억지부터 부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시도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심의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비를 올리는 것, 주민 동의가 대전제다. 그러나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상을 만큼 활동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시민 교통분담을 의원만 처사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올해도 여론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발전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한다.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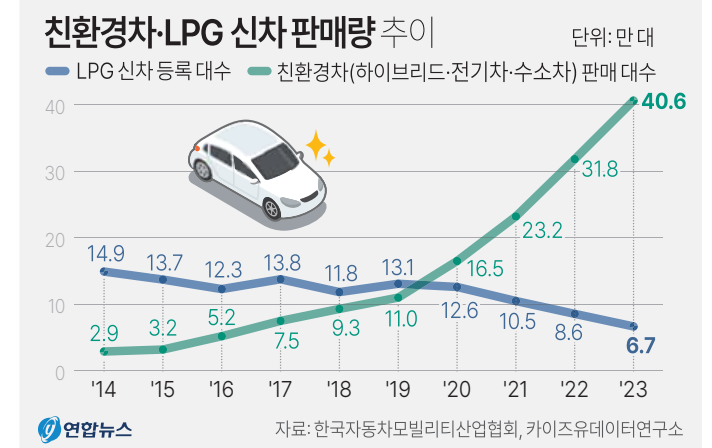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 작년 처음 LPG차 넘어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는 총 212만1천대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LPG차 누적 등록대수 183만3천대를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차와 LPG차의 누적 등록대수가 역전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누적 등록 비중도 친환경차 8.2%, LPG차 7.1%로 지난해 처음 뒤집어졌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누적 등록대수(등록 비중)는 각각 1천31만1천4천대(47.5%), 950만대(36.6%)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를 종합하면 2014년 2만9천대에 불과했던 국내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2015년 3만2천대, 2016년 5만2천대, 2017년 7만5천대, 2018년 9만3천대, 2019년 11만대, 2020년 16만5천대로 꾸준히 늘었다.

2020년대 들어선 판매량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는데, 2021년 23만2천대, 2022년 31만8천대, 2023년 40만6천대로 매년 10만대 가까이 늘었다. 반면 2014년 14만9천대에 달했던 LPG 신차 등록대수는 2018년 11만8천대까지 떨어졌고, 2020년 12만6천대, 2021년 10만5천대, 2022년 8만6천대, 2023년 6만7천대로 감소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
| 정치부 650-2030 | 사 진 부 650-2080 | 마케팅본부 650-2070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 설 실 650-2006 | 편집지원국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 V 본 부 650-2009 | 사업본부 650-2007 | 입부국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업 무 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